

대만의 정권교체와 사회의 재구조화

朴 允 哲*

I. 들어가는 말

II. 당국체제의 해체와 사회조직의 재조직화

III. 민족적 갈등과 정체성의 위기

IV. 대만해협 양안의 교류와 통일문제

V.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대만사회는 2000년 3월 총통 직접선거를 통해, 50여 년 동안 대만사회를 지속적으로 장악하고, 통치해온 국민당정권을 무너뜨리고, 대만의 본토의식 즉 “대만의식”¹⁾으로 무장된 대만 본성인들이 주도하는 민진당에 의한 정권교체를 실현함으로써, 정치, 경제 및 사회 등 사회전반에 걸쳐 대전환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호서대 중국학전공 교수

1) 외성인이 지배하는 국민당 지배체제가 추구했던, 大中華主義(中國中心主義) 즉 “중국의식”에 도전하는 대만 본성인들의 대만 본토 중심주의적인 의식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언급될 것이다.

이러한 대만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혹은 다른 중진국 국가와 매우 상이한 역사적 사회, 문화 전통 속에 발전해온 대만의 특수한 경험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대만사회는 1949년 국민당정권이 국공내전에서 패배하여, 대만으로 철수한 이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레닌주의식 “당국체제(party-state system)”²⁾에 의하여 사회의 깊은 기층사회 조직까지 통제되고 있었다. 국민당정권은 자신의 당국체제적 특징과 특수한 “이민정권(immigrant state)”³⁾적인 성격 때문에 대만사회를 통제하는데, 독특한 지배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그러한 지배전략 하에 형성된 사회조직 체계는 단순한 중앙정부의 권력교체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관찰은 당국체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어떻게 국가와 사회가 새롭게 재조직화될 것인가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둘째, 대만사회는 자신의 이민사회적 성격과 이민정권의 특수한 통치전략으로 인하여, 민족간의 사회적 격리와 균열이 사회 깊숙이 내재해 있다. 이러한 민족간의 대립은 정당의 민족의식에 호소한 동원전략과 특히 기독교세력인 외성인들의 불

2) 국민당정권은 대륙을 통치하던 초기부터 시작하여, 대만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소련이 채택한 레닌주의의 민주집중제를 근간으로 하는 당국체제의 기초 위에, 당이 국가의 우위에 서서 직접 통치하는 사회주의식 통치체제를 답습하였다.

3) 국민당 정권은 본토의 사회적 기초 위에서 성립된 정권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주의 정권과 유사하게, 외부로부터 즉 중국 대륙으로부터 이주해온 이민정권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 에 대한 논의는 龔宜君(1995)을 참조하십시오.

안감 때문에 증폭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족적 균열은 대만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변천을 이해하는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치와 교류를 반복하고 있는 대만과 중국대륙의 관계는 대만국민의 정치, 사회적 태도를 결정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정책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만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대만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상술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즉 국민당정권의 당국체제와 사회의 상호작용, 민족적 갈등과 그들의 정체성위기 그리고 대만해협 양안의 교류와 상호의존 등이 대만 국민의 정치, 사회적 의사를 결정하고,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재구조화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당국체제의 해체와 사회조직의 재조직화

1. 이민정권과 사회통제방식

대만의 국가체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1945년 중국 국민당정권이 대만을 해방시킬 때,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정부가 남기고 간 모든 사회통제 시스템 및 사회적 자원동원 체제를 고스란히 유지함으로써, Alavi(1972)가 개념화했던, “과대성장국가(over-developed State)”

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그 위에, 1949년 중국대륙의 국공내전에서 패퇴한 국민당정권이 대만으로 철수할 때, 자신이 중국대륙에서 유지하고 있었던 방대한 관료조직과 8대 정보조직(國家安全廳, 國民黨中央黨部, 情報局, 警備總部, 調查局, 憲兵司令部, 總政治作戰部 및 救國團 등)을 들여와 대만사회를 통제함으로써, 국가는 사회에 대한 무소불위의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었다(韋積慶, 1989; 朴允哲, 1990).

다른 한편, 시민사회적 상황을 관찰하면, 국민당정권이 대만으로 철수하기 전에, 이미 2.28 사건을 통해 2만 명이 넘는 대량의 대만 본토엘리트들을 무참하게 제거함으로써, 대만사회 내에 대항이데올로기를 창출하여, 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을 철저히 초토화시켰다. 국민당정권이 대만으로 철수한 후에는, 본토의 사회세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적 위치에 있는 이민정권의 장점 즉 “구조적 자율성(structural autonomy)”에 가까운 “국가자율성(state autonomy)”을 가지고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내의 유일한 대항세력인 지주계급을 철저히 파괴하였다. 그들의 토지개혁은 가히 사회주의 국가의 그것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한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는 최소한의 시민적 논의도 불가능한 최악제 사회형태를 띠고 있었다.

상술한 국민당정권과 시민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대만의 국가형태는 3세계나 한국의 역사경험에서 관찰되는 “과대성장국가”모델을 뛰어넘는 “超과대성장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당정권은 대만 본토에서 자생적으로 탄생된 본토정권이 아니라 대륙에서 이주해 온 이민정권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회통제와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동원을 위해 독특한 지배전략을 구사하였다. 국민당정권은 중국대륙 통치시대 때부터 이미 레닌주의식 “당국체제”에 기초한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대만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여전히 당국 지배체제를 유지하였다.

국민당정권은 전면적인 사회통제를 위해 사회의 기층조직에까지 당의 조직을 뿌리깊게 침투시켰으며, 이러한 조직에 기초하여, 대다수의 민중을 장악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 省級 행정단위에는 성급 지방당(省黨部), 각 縣 및 市에는 현 및 시급 지방당(縣市黨部), 區·鄉 및 鎮에는 구급 지방당(區黨部), 村 및 里에는 小組, 그리고 린(鄰)에는 당원이 배치되어 있었다(龔宜君, 1995: 115). 이와 같이 국민당정권은 중앙에서 지방의 최소 기층단위에까지 엄밀하고, 수직적인 조직체계를 운용함으로써, 대만 농촌의 기층사회에까지 직접 침투할 수 있는 지배의 연결망을 형성시켰다. 이것은 국민당정권이 한편으로는 이민정권의 취약점을 보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효율적이고, 전면적으로 대만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본토 엘리트나 사회세력을 이용한 간접지배전략이 아니라 중앙당과 중앙정부에 의한 조직적이고, 수직적인 직접통제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당정권은 향 및 진 등의 기층조직에 까지 중앙당이 그 지방과 무관한 상근 당무책임자를 직접 파견하여, 기층조직을 지휘 및 통제하였는데, 이러한 상근 당무책임자는 중앙 통치엘리트의 직접적인 대리인이며, 동시에 이민정권인 국민당정권을 대만 기층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침투지점이었다(龔宜君, 1995: 117).

다른 한편, 국민당정권은 대만으로 이주한 후에, 최소한의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인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는데, 국민당정권은 선거동원을 위해, 이민정권에 호응하는 본성출신의 지방엘리트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국민당정권은 그들을 통해 대량의 지방 민중들을 선거에 동원시키고, 아울러 그들이 선거에 당선된 후에 중앙정권의 정책에 순응하도록 하였다. 국민당정권은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공권력과 공영 및 당영기업을 이용하여, 경제적 자원을 창출하고, 이를 지방엘리트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여 지방엘리트들이 서로 경쟁하게 하는 분할지배전략을 구사하였다. 지방엘리트들은 이러한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지지자들을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 파벌을 형성하고, 그 지방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한편 국민당정권에 대한 충성경쟁을 벌였다(朱雲漢, 1989).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당 정권은 대만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장악과 통제를 위해, 레닌주의 식의 당국체제의 기초 위에, 한국의 통·반에 해당하는 村 및 里 그리고 鄰에 이르는 기층 사회조직까지, 중앙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둠으로써, 완벽한 사회적 침투를 실현하고 있었으며, “超과대성장국가”의 행정권력과 방대한 공영 및 당영기업에 근거한 풍부한 물적 기초를 활용하여, 지방파벌세력을 통제할 뿐만아니라 사회적 자원으로 동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체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정치,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정권교체 전까지 지속되고 있었다.

2. 공영 및 당영사업과 사회적 자원의 직접적 통제

국민당정권이 대만으로 이주한 후에, 정권의 담당자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체제를 표방하고, 자본주의적 경제발

전전략을 채택하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기초를 직접 통제함으로써, 이민정권의 태생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黨國자본주의”⁴⁾라는 독특한 체제를 유지하였다. 국민당정권은 이주 초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적 자원을 독점하였으며, 민주화가 추진되었던 1990년대에도 여전히 사회적 자원의 상당 부분을 직접 통제하면서, 이 경제적 자원에 기초하여, 정치상의 지배체제를 공고화하였다. 당국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은 공영 및 당영사업과 그 활용인데, 그 성격이 실제로 재정 및 경제의 차원을 초월하여, 정치 및 사회의 범주에까지 확대됨으로써, 국민당정권의 당국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陳師孟等, 1991: 17).

대만의 공영 및 당영사업 규모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방대하다. 1990년의 통계에 의하면, 당영사업을 제외한 공영사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 이르며, 자본형성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7%에 이른다(新臺灣發展文教基金會, 1992: 87). 당영사업을 포함할 경우, 생산량은 대만GNP의 30%를 초과할 것으로 평가된다(陳師孟等, 1991: 90). 그러나 재단법인 등의 방식으로 은폐된 공영사업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훨씬 방대할 것이다. 당국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전 대만지역 면적의 68.4%에 이른다(陳師孟

4) 대만의 당국자본주의는 국가자본주의의 일종으로써, 특히 국민당이 경제적 생산영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형적 자본주의체제를 가리키는 말인데, 대만사회 내에서는 국민당의 경제에 대한 독과점을 비판하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等, 1991: 89). 당영사업 규모는 대만의 가장 신뢰할 만한 지식인 단체인 澄社의 보고서에 의하면, 1991년 현재 5000억 NT 달러(한화 약 2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陳師孟等, 1991: 70), 국민당이 스스로 발표한 공식 수치만 봐도, 2000년 4월 현재 780억 594만 NT달러(한화 약 3조 1202억 원)에 이르며(中國時報, 2000. 6. 18), 비공식 혹은 은폐된 방대한 당영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그 수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한편, 그 사업범위를 보면, 공영사업은 차치하고, 당영사업마저 매우 광범위하다. 국민당은 현재에도 7개의 거대한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에는 시멘트, 석유화학, 제약, 생화학, 방직, 전자, 강철, 수도, 전기, 천연가스 등이 있으며, 또 건축업, 운수창고업, 수출입을 포함하는 대형매매업, 신탁 및 증권업, 금융 및 투자업, 문화 및 대중매체업 등 전 산업 및 문화 분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독과점적인 사업들이다⁵⁾(新臺灣發展之教基金會, 1992: 86-87).

국민당정권은 상술한 방대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직접적 통제와 국가 기구의 강제력을 이용하여 창출하는 방대한 경제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대만 사회를 매우 효과적으로 통치하였다. 노동조합을 포함하

5) 대만이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게 된 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라기 보다는 대기업 및 독과점부문을 국민당 정권이 독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성인들은 부득이 국민당 정권의 관심 밖에 있는 중소기업 영역에서 자신의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까닭에 대만의 중소기업주 혹은 구중산계급들은 다른 나라의 역사경험과는 상반되게 정치적으로 야당을 지지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여 준다.

는 주요한 사회적 조직들은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적 지배의 틀 안에서 단순한 강제력에 기초한 억압적 복종뿐만 아니라, 특수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받음으로써, 자발적인 충성을 하였다. 그러한 경제적 이익교환 시스템은 이민정권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에서 운용하고 있는, 파벌화를 통한 분리지배 전략을 구사하는데 더욱 유용하게 작동하였다(陳明通, 1995: 112-13, 153).

3. 당국체제의 해체와 국민당의 대응

1980년대 후반, 장경국총통 정권이 시민사회의 요구에 굴복해서라기보다는, 시민적 요구를 사전에 봉쇄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의 확립에 적응하기 위하여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40여 년간에 걸친 계엄령을 해제하고, 민주적 개혁 조치를 실시하였다. 일당 독재체제를 포기하고, 반대당의 설립을 허가했으며, 언론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였다. 蔣經國총통 사후에 등장한 본토인 출신의 李登輝 총통이 영도하는 국민당 정권은 민주화 및 본토화 정책을 상당한 정도로 진척시켰다. “以黨領政” 즉 당이 모든 국가 및 국가기구를 통치하고, 영도한다는 레닌주의식 당국체제의 기본골격을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국가기구의 위상을 당기구와 대등한 혹은 당기구의 그것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변화시켰다. 이를 위해 “中華民國” 즉 전 중국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담고, 또 독재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실시했던 국민대표대회에 의한 총통 간선제도를 폐지하고, 총통을 대만지역 주민만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함으로써, 대만총통으로 왜소화시켰으며, 입법원 또한 중국대륙을 대표하는 입법의원들은 모두 퇴출시키고, 대만지역만의 입법

원을 구성하였다. 시민적 자유는 상당한 정도 신장되었으며, 시민사회 운동이 상당한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상술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국지배체제의 기본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여전히 국민당은 국가의 정책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또 공영 및 당영 사업을 통해 사회적 자원을 직접 통제하고 있었다. 심지어 당영사업의 규모는 1990년대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되었다. 그리고 주요한 사회조직 내에는 국민당의 당조직이 지속적으로 지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심지어 대학교를 포함하는 학교영역에서도 여전히 국민당의 조직은 작동하고 있었다.

2000년 3월 본토의식으로 무장된 반대당인 민진당에 의해서 이룩된 대만의 정권교체는 대만이 50여 년이나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당국지배체제의 기본틀을 철저하게 부수고, 새로운 민주사회를 건설할 절호의 기회를 맞게 해주고 있다. 국민당이 정권을 상실함으로써, “以黨領政”의 당국체제는 자동적으로 해체되어야 할 운명을 맞이했으며,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새로운 관계설정을 요구받고 있다. 국민당은 중앙정부 권력을 상실함으로써 국가기구의 강제력에 의한, 사회의 통제가 불가능해졌으며, 자신의 주요한 물적 기초였던, 거대한 중앙정부 수준의 공영사업에 대한 직접적 통제력을 잃어버림으로써, 전통적 경제적 이익에 기초한 사회적 동원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국민당의 몰락이나, 사회에 대한 통제와 동원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좀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관찰해야 한다.

민진당의 승리는 자신의 사회적 동원 능력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이루어 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당 내부의 자기 분열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민진당의 사회적 기초는 매우 취약하며, 국회는 여전히 국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요한 두 야당인 “親民黨”과 “新黨”의 의석과 일부 친국민당 연합의 무소속 의석을 합산한다면, 거의 2/3에 육박한다⁶⁾. 현재, 국민당을 포함한 주요한 3대 야당은 대통령선거에서 분열되었으나, 기본적으로 나머지 2당은 국민당에서 분리된 정당이며, 정치적 성향이나 기득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다. 실제 이 3당은 2000년 10월과 11월 제 4핵발전소 건설 중지를 둘러싼, 첨예한 여야의 정치대립 국면에서, 자신들의 기득이익을 지키기 위해, 완벽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민진당 정권을 압박하고 있으며, 심지어 陳水扁총통의 직접적 사과까지 받아내며, 총통을 파면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국민당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적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상당부분 유지해 갈 것으로 보인다.

6) 1998년의 입법원 선거결과를 보면, 전체의석 225석 중 국민당은 123석이고, 민진당은 70석이며, 신당은 11석이다(이 당시 친민당은 창당되지 않았다). 전체의석에 대한 각 당의 비율은 각각 54.67%, 31.11%, 4.89%이다. 즉 민진당의 입법원 의석 수는 전체 의석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중화민국내정부중앙선거위원회, <http://www.cec.gov.tw>). 2000년 3월 총통선거에서 근소한 차로 패배한 무소속의 宋楚瑜 후보에 의해 2000년 4월 창당된 친민당이 일부 국민당 입법의원들을 흡수해 갔으나, 기본 구도에는 변화가 없다(현재 친민당의 의석은 17석이다).

국민당은 비록 총통선거의 패배로 인해 중앙정부 권력을 상실했지만, 그것이 곧 바로 50여 년 간 당국체제하에 구축해 놓은 국민당 조직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민정권의 약점을 보완하고, 정권에 대한 충성과 선거 동원을 위해 용이 주도하게 구축해 놓은 지방의 조직들은 여전히 상당한 조직적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민당은 여전히 다수의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당국자본주의 체제의 전통 하에서 지방정부 스스로 상당한 수준의 공영사업을 계속 운영할 것이고, 지방 파벌은 국민당 정권의 비호 하에 이미 국민당과 이익을 교환하는 거대한 지방자본 세력이 되어 있다(王振寰, 1996: 142). 또 이전에 국민당 지방당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거나 통제되었던 당영사업은 총통선거의 패배와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당은 중앙권력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 권력과 경제적 유혹을 통해 지방 파벌을 상당한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통제 및 동원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취약한 민진당의 입장에서 볼 때, 거대한 공영사업부문 내에 뿌리깊게 내재해 있는 국민당 조직을 일시에 제거하거나 혹은 민영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당은 여전히 공영사업부문에 대한 일정한 통제력을 발휘할 것이다. 당영사업부문은 법률상 국민당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정권교체와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것이다. 당영사업 규모는 전술한 바와 같이 비공식집계에 의하면 한화로 20조원에 이르는 방대한 수준이며, 동시에 전 산업 및 문화부문에까지 광범

위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당은 이러한 물질 기초에 의지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국민당은 대만의 3대 공중파방송 중의 하나인 “中華電視公司”를 당영기업으로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中央日報”를 비롯한 언론기관과 상당한 시청률을 가진 다수의 케이블방송도 장악하고 있다. 또 나머지 2개 방송공사도 국민당의 자본이 직간접적으로 투자되어 있고, 기존의 국민당 조직이 상당한 수준으로 재가동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구성원들이 보수적인 색채가 매우 강하다. 따라서 국민당은 민진당 정부와의 이데올로기 투쟁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유지할 것이다.

4. 국가조합주의적 사회조직의 와해와

자주적 시민조직의 활성화

대만사회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민주화의 여정을 거치는 동안 환경, 소비자 및 지식인 조직을 포함하는 시민사회 조직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또 90년대의 민주화과정 중에 민주화의 진전을 위해 일정한 수준의 공헌을 하였다. 특히 “宜蘭縣”의 “핵발전소 건립 반대운동”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상당한 수준의 동원 능력과 결집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통적 시민사회 조직인 노동조합과 기업주 및 자영업자 등의 조직은 여전히 국민당 정권의 “국가조합주의”적 지배의 틀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노동조합과 직업적 조직(漁會, 農會, 水利會, 商會, 工業會 등)은 국민당정권의 지도하에 설립되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민당정권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그 간부들의 대부분은 국민당 당원이거나 국민당과 연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조직들은 평시에는 국민당의 외곽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선거시에는 국민당의 조직동원 기구로 전환되었다. 정권교체 후에 이러한 사회조직 내에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2000년 4월, 대만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전국적 노동조직인 “全國總工會(대만노총)”의 위원장 선거에서 여상을 뒤엎고, 국민당이 추천하고, 지지한 후보가 낙선하고, 자유주의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 노동조합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商業總會” 및 “工業總會” 등 직업적인 사회조직 내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민당 통제하에 있던,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이 해체되고, 재조직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中國時報社論, 2000. 4.11). 이러한 변화는 국민당정권이 수립해 놓았던 국가통합주의적인 통제의 틀이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적 조직의 탄생을 예고하는 전주곡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만 시민사회 발전 역사를 관찰해 볼 때, 그 변화의 속도가 그다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沈宗瑞, 2000).

대만의 노동조합조직은 한국과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매우 취약하고 저발전된 상태에 있다. 그들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완전하게 국민당정권의 통제하에 있었으며, 다른 시민사회조직 즉 학생조직 혹은 시민단체들과 인적 및 정책

연대를 맺어 본 경험이 매우 적으며, 또 대만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의 영향으로 강력한 투쟁 경험과 동원능력을 가진 단위 노조들이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다. 특히 지방에서는 지방정부 및 지방 파벌과의 이익 교환구조 상에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의 활성화 가능성은 중앙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태에 있다.

더욱이 공업 및 상업 단체들은 여전히 국민당과의 상호 결탁관계에 있으며, 이데올로기 상으로도 쉽게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지방정부 및 파벌과의 뿌리 깊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中國時報 社論, 2000. 4. 11).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전통적 시민사회조직을 해체하고, 새롭게 조직하는 변화의 속도는 기대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으며, 동시에 지방으로 갈수록 더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시민사회 조직은 신사회 운동 조직이 될 것이다. 신사회 운동 조직들은 80년대 및 90년대 초반의 민주화투쟁 과정 중에서 다른 사회조직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지식인 단체들이 주도한 정치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환경운동 조직이 지방 하부조직과의 긴밀한 연계 하에서 수행한 동시다발적인 환경운동은 권위주의체제의 민주적 전이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다른 한편, 신사회운동의 지도자들은 반대당인 민진당 및 비판적 지식인 단체 및 그룹들과 가장 원활한 인적교류와 정책적 연대를 수행하였다(何明修, 2000: 88-94; 吳介民, 1989). 대만의 민주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주적 시

민사회 조직의 활성화는 전통적 사회조직의 자기 개혁을 통해서 이룩되기보다는 신사회운동 조직이 주도하는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실현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진당과 신사회운동세력 사이에는 강력한 “선택적 친화성(elective affinity)”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암묵적 합의가 민주화의 방향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신사회운동은 상대적 침체국면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何明修, 2000: 27), 민진당 정권의 정책수행을 위한 후원군 역할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민족적 갈등과 정체성의 위기

1. 대만사회의 민족구성

대만 사회는 이주민의 정착지라는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한국과는 상이하게 비교적 복잡한 민족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민족의 구성은 다음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外省人”, “閩南人(臺灣人)”⁷⁾, “客家人” 그리고 “原住民” 등으로

7) 대만사회 내에서 “臺灣人”이라는 개념은 복건성 배경의 대만인만을 의미하거나, 혹은 그 외의 광둥성 배경의 客家人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복건성 배경의 대만인을 “閩南人” 혹은 “福老人”이라고 구별해서 말하기도 한다. 또 민남인과 객가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本省人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하튼 민남인과 객가인은 언어나 문화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 시기나 거주지

나뉘어진다(張茂桂, 1997a: 43-45). 그러나 전 3자는 모두 동일한 漢族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이한 민족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여겨진다. 외성인은 국민당정권이 1949년 중국대륙에서 있었던 국공내전에서 패퇴하여 대만으로 철수할 때, 함께 온 정부관원 및 군인과 그들을 따라 이주한 사람들 중에서 대륙을 본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그 후예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정도가 되는데, 대만이 민주화되기 전에는 국가 및 국민당의 중요직책과 공영 및 당영기업의 간부를 사실상 독점하였으며, 민주화된 현재에도 국가, 군대, 공영 및 당영기업 등에서 여전히 상당한 세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민남인은 대만 사회내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민족으로서, 400여년전부터 중국의 福建省에서 대만해협 건너편의 대만섬으로 이주해 대만 남부의 臺南市 부근의 해안과 평지에서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에 이른다. 그들은 외성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국가부문에서 배제된 채, 민간부문에서 중소기업 위주의 창업을 통해 대만 특유의 경제기적을 이루어 낸 사람들이며, 따라서

역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동화되지 않고, 전통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며, 서로에 대한 배타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外省人과 대립할 때에는 서로 동일한 本省人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동일한 본성인으로 간주된다. 다른 한편, 대만 국외에서는 중화민국 대만 여권을 소지한 대만 거주인 모두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상대적으로 강한 대만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객가인은 대만인보다 조금 늦게 중국의 광둥성으로부터 이주해 왔는데, 이로 인해 평지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릉지대에 정착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19세기 후반까지도 대만인과 잦은 무력충돌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당체제가 성립된 이후 외성인과의 대립 시에는 자신들을 대만인으로 간주하며, 대만인의 편에 섰다. 그들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16%정도가 된다.

마지막으로 원주민은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주 오래 전에 남방으로부터 이주해 와 대만섬에 정착하고 있던 토착민족이다. 그들은 17세기 중엽 대만인이 대량 이주해 오기 전에는 대만섬의 주인이었다. 그들은 9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漢族에 속하는 기타 다른 세 민족과는 언어나 문화적 특징이 전혀 상이하다. 그들의 인구는 34만 명 정도이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하며, 사회적 역량도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을 분석할 때, 언제나 배제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주민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조직적이고,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2. 사회적 자원의 분배와 민족적 갈등

국공내전의 패배로 대만으로 철수해 온 국민당정권은 기본적으로 외성인에 의한 이민정권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외성인이 국가의 정치적, 경제력 및 사회적 권력을 독점하였다. 특히, 2.28사건을 거치는 동안 대만본토의 엘리트들을 거의 몰

살시키다시피 했기 때문에, 본성인의 외성인에 대한 적대감은 뿌리깊은 것이며, 심지어 그들은 국민당정권을 일본의 제국주의 정권과 같은 “外來政權”으로서 간주한다.

국민당의 당국지배체제 하에서 외성인은 국민당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대만사회내의 우월집단으로서 지속적으로 정치 및 사회적 권력을 독점하였다. 따라서 외성인들은 국민당정권이 사회적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軍·公·教” 등 관리 혹은 서비스부문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정치권력의 배분이나 사회적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불평등 현상을 고착화시켰다. 외성인들의 관리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직업활동은 그들로 하여금 중산계급적 계층위치와 문화적 정체감을 갖게 하였다(張茂桂, 1997a: 49). 그들은 자신들이 일체감을 느끼는 중화문화와 國語(北京語)를 고급문화의 표상으로 간주했으며, 노동계급과 구중산계급(자영업자 및 소기업주 등)이 다수를 이루며, 대만의 지방문화에 일체감을 느끼며, 국어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어눌하며, 대만어(북건성 방언을 모태로 하는 지방 방언)를 사용하기를 선호하는 본성인들에 대하여 문화적 우월감을 드러내었다.

본성인들은 국가부문 혹은 그와 연관된 사회적 영역들이 모두 외성인들에 의하여 독점됨에 따라, 다른 활로를 모색하였다. 즉 국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정치적 풍향으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사유경제 부문에서 자신들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각종 생산, 자본동원 및 시장의 형성과정은 통상적으로 일반 백성들의 사회적 생활과 연관된 관계

망을 이용해 진행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구의 다수를 점하며, 본토화된 사람들인 본성인들은 자신들의 장점을 잘 이용하여 새로운 경제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가공수출위주 및 노동집약적이고, 탄력적인 생산조직을 본성인들의 관계망 속에서 유효적절히 활용하여, 세계시장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본성인들은 이러한 관계망을 활용하고, 또 문화적 일체감을 유지하기 위해, 종업원의 고용 시에 대만어를 사용하는 본성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張茂桂, 1997a: 49). 이러한 배타적 관계망은 본성인과 외성인의 교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상호동화와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외성인과 본성인은 사회적 영역내에서 대체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부문에서 활동하며, 자신들의 문화적 일체감을 유지해왔다. 그러한 현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그러한 사회적 분업과 격리현상이 명확히 관찰되고 있으며, 그것이 야기한 상호 배타적 성격은 그들의 정당지지 태도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3. 정당의 민족에 대한 정치적 동원과 문화적 투쟁

李登輝총통이 1990년대 본토화정책을 추진하기 전까지 국민당정권은 대만의 정치 및 사회의 권력구조 측면에서만 민족적 불평등을 조장한 것이 아니라, 문화방면에 있어서도 “중화문화” 및 “中國意識”을 고양하고, “臺灣意識” 및 “본토문화”

의 발전을 억압하였다(王甫昌, 1998: 9-10; Chang, 1994). 이러한 까닭에, 주로 본성인 반체제인사들에 의하여 1987년 창당된 “민진당”이 주도한 민주화 운동은 대만의식에 기초한 본성인의 민족적 운동 성격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민진당은 비록 공개적으로 본성인들을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표방하지는 않지만, 본성인의 민족적 특징이나 환경을 강조하여, 그들의 의식속에 대만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고취시킴으로써, 그들을 민주화운동에 동원하는 전략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다(王甫昌, 1994: 8). 그들이 주장하는 “대만인에 의한 대만의 통치”⁸⁾라는 구호는 이러한 전략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張茂桂, 1997b: 101).

민진당은 대만의 공식언어인 국어(북경어)를 중국의식을 고취시키는 수단이나 그 과정의 일부분을 간주하고, 대만의식의 회복이나 고양을 위해서는 억압된 모국어인 “대만어”의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그들은 공개된 장소의 연설조차 모두 대만어를 사용한다(張茂桂, 1997a: 52; 王甫昌, 1994: 7-8). 이러한 전략은 본성인의 가슴속에 내재해 있던, 대만의식을 자극하여, 정치적 동원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 3월의 총통선거에서도 陳水扁총통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宋楚瑜후보가 외성인이었기 때문에, 민족적 정서에 기초한 정치적 동원이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

8) 비록 민진당이 주장하는 대만인에는, 대만의 미래에 대해 운명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사람이면, 외성인 혹은 본성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인의 의식 속에는 본성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였다.

국민당은 1990년대의 본토화 과정을 거쳐 상당한 수준의 대만화를 실현하여 외성인과 본성인 모두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적구성이나 정책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민족적 정서에 기초한 정치적 동원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 않다. 소극적으로 민진당의 대만의식에 대항하기 위해, 현재의 국민당은 대륙에서 이주해 온 이전의 중국 국민당이 아니며, 대만 본토에서 새로 시작하는 “대만 국민당”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적으로 외성인의 중국의식에 기초하여, 정치적 동원을 하는 정당은 1993년 국민당을 탈당한 2세대 외성인들의 주도하에 창당된 “신당”이다. 그들은 “중화민국 수호”라는 구호 아래 외성인들의 중국의식을 자극함으로써, 외성인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였다. 또 신당은 다수 외성인들의 계급적 위치를 고려하여 자신이 중산계급의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외성인들은 본토화와 대만의식의 대두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과 동시에 안정을 회구하는 중산계급적 성격 때문에, 신당의 주장에 공감하며(張茂桂, 1997b: 102), 그에 대한 지지를 통해 자신들의 단결된 의사를 표출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1994년의 臺北市長 선거에서 외성인의 69%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王甫昌, 1998: 6). 외성인의 신당에 대한 이러한 지지는 2000년 3월 총통선거에서 외성인 출신의 유력한 무소속 총통후보이며, 현 「친민당」 총재인 宋楚瑜에게로 전이되었다.

마지막으로 총 인구의 15-16%에 이르는 객가인의 정치 및 사회적 동향에 대해서도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은 외성

인이 주도하는 국민당의 당국지배체제에 대항할 때에는 복건성배경의 본성인과 더불어 본성인(혹은 대만인)이라는 일체감을 드러내었으나, 복건성배경의 본성인 즉 민남인에 의한 정권교체와 그들이 주도하는 정치, 사회적 대만화에 대하여, 상이한 태도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이미 정권교체 이전에도 상이한 태도를 표출하였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민남인이 주장하는 대만민족주의의 담론과 호소는 대만어를 국어로 승격시키고, 민남인의 사회, 문화적 전통을 대만사회의 주류적 전통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에 대하여 객가인들은 사회, 문화적으로 민남인에 의하여 압박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이를 비판하기 위해 대만민족주의를 대만인 위주의 소비니즘의 일종이라고 간주하였다(王甫昌, 1998: 16-18). 객가인은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민족의 존엄을 지키자는 구호아래 “객가인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조직화된 역량에 기초한 정치, 사회적 동원을 시도하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객가인 정당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술한 민족적 정서에 호소하는 정치적 동원전략은 향후에도 대만사회의 균열 속에서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며, 또 완벽한 대만의식으로 무장된 민진당에 의해 정치적 권력을 차츰 박탈당할 운명에 처한 소수세력인 외성인들의 초조함은 극대화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민족적 결집도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민진당 또한 이러한 외성인들의 민족적 동원에 대항하고, “본토화된 국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대만의식을 더욱 고양시키려 할 것으로 예측된다.

4. 국가의 정체성 위기

대만이 1970년대 후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에서 급전직하하여, 회원국의 위치마저 박탈당하고, 중국과 미국과의 국교정상화에 따라 미국과 단교한 후에, 대만 민중들은 대만 즉 “중화민국”이 이제 더 이상 전 중국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그것이 위기로 치달지는 않았다.

1980년대 말 민진당이 창당되고, “대만의식”과 “대만독립”이 사회적 담론 영역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국가정체성 위기가 시작되었다. 민진당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력들은 민주화를 “본토화” 혹은 “대만화”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며, 동시에 “대만인”이라는 정체성은 “대만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했다(張茂桂, 1997b: 101). 따라서 그들은 대만독립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당헌 및 당의 강령에 이를 명시하였다. 이러한 민진당의 정책은 대만해협 반대쪽에 있는 중국대륙 공산당정권으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게 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복잡한 국면을 야기하고 있다.

민진당의 대만독립 주장에 대항하여, 국민당은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고수하며, 민진당의 독립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민진당의 주장에 대하여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세력은 외성인 2세대로 구성된 신당이다. 신당은 “대만독립반대”와 “중화민국 수호”를 내세우며 외성인의 정

서를 대변하고 있다. 최근에 결성된 친민당 또한 국가정체성 면에서 신당과 유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독립과 독립반대(통일)에 대한 국민적 분열은 실제로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도 극명한 균열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사회조사인 “臺灣族群關係的社會基礎調查(대만민족관계에 관한 사회기초조사)”⁹⁾인 아래 표1에 의하면, 대만 국민들의 국가정체성이 민족적 정서와 상당히 근접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만인 쪽에 가까운 응답 비율 즉 “대만인 이다”와 “대만인 이고, 또 중국인이다”를 합한 비율은 80.2%에 이르고, 중국인 쪽에 가까운 즉 “중국인이다”와 “중국인이고, 또 대만인이다”를 더한 비율은 17%정도이다. 이는 본성인과 외성인의 분포비율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항 목	샘플수	백분비
나는 대만인입니다.	2282	65.3
나는 대만인이고, 또한 중국인입니다.	520	14.9
나는 중국인이고, 또한 대만인입니다.	273	7.8
나는 중국인입니다.	323	9.2
기 타	38	1.1
모 립	8	0.2
대답거부	52	1.5
총 계	3496	100.0

<표 1> 대만민중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태도¹⁰⁾

9) 이 조사는 중화민국 中央研究院 王甫昌 박사가 중화민국 行政院 國家科學委員會의 위탁을 받아, 1998년 8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실시한 것인데, 그 최종보고서인 「臺灣族群關係的社會基礎調查計劃執行報告」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자료를 사용하게 허락해준 王甫昌 박사에게 감사를 표시한다.

10) 국가정체성으로 표시된 표1에 대한 원래 질문은 “대만에서, 어

또 다른 사회조사 즉 “民衆對當前兩岸關係之看法(민중의 최근 양안에 대한 견해)”¹¹⁾에서도 비록 질문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상기 사회조사와 유사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신은 대만인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44.8%이고, “자신은 대만인이고, 또한 중국인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39.9%이며, 마지막으로 “자신은 중국인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13.1%이다. 이러한 비율은 실제로 그들의 정당 지지와도 상당한 중복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즉 첫 번째 응답자 중의 다수가 민진당을 지지할 것이고, 두 번째 응답자의 대다수는 국민당을 선호할 것이며, 마지막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신당을 지지할 것이다¹²⁾. 그러나 최근이 친민당이 창당됨에 따라 신당 표 대부분과 국민당 표의 상당 부분이 친민당으로 이동할 것이다.

상술한 국가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가장 큰 초조감을 드러내며, 배타적 결집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외성인이다. 민진당에 의한 정권교체 이후, 대만 사회가 대만화 혹은 본토화 수준을 넘어, 독립에까지 이른다면, 그들은 기득이익의 상실은

떤 사람이 당신은 중국인입니까, 아니면 대만인입니까 하고 묻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在臺灣, 如果有人問, 你是中國人還是臺灣人, 你會怎麼說?)”이다. 이 질문이 “국가정체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일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11) 이 조사는 대만의 中華徵信所가 중화민국 行政院大陸委員會의 위탁을 받아 1999년 8월 27일에서 31일 사이에 전화방문을 통해 행한 조사이다.

12) 이 조사는 전술한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질문방식이나 조사결과에서 약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만, 국가정체성 면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이고, 문화적 소수파로 전락하여 문화적 우월감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만어를 국어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대만어를 구사할 줄 모르는 그들은 사회적 혹은 문화적으로 이방인 신세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직면하고 있다.

IV. 대만해협 양안의 교류와 통일문제

1. 양안의 경제 및 사회교류와 상호의존

대만의 중국에 대한 투자 및 경제교류는 1980년대 초 홍콩을 통한 간접투자로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급속적인 증가속도를 보여주었다. 중국 측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80년대 이후 중국에 투자된 대만자본의 누계총액은 214.2억 달러에 이른다(行政院大陸委員會, 1999: 192). 그러나 이 숫자는 중국 대륙 당국의 공식허가를 거쳐 투자된 액수만을 의미할 뿐이다. 대만인들이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방식 즉 홍콩기업을 통한 간접투자나 혹은 고향방문(探親)등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투자한 액수를 고려한다면, 실제 투자총액은 공식투자 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떤 언론기관은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중양일보, 2000, 11.). 또 대만의 중국에 대한 수출액 비율을 보면, 1997년과 1998년 두 해의 경우에 전체 수출총액의 18.4%와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흑자는 각각 185.4억 달러와 157.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行政院大陸委員會, 1999: 215).

상술한 이러한 숫자들은 대만사회가 정치, 사회적 정책이나 태도를 결정할 때, 양안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거액의 대만자본이 대륙 각지에 투자되어 있으며, 그들의 중국대륙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독립을 주장함으로써 중국과의 긴장을 확대시키는 것은, 대만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외성인 혹은 본성인을 막론하고, 경제적으로 중국과 연관을 맺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정치, 사회적 의사를 결정할 때, 실제로 중국요소의 영향을 받고 있다.

대만과 중국대륙의 사회적 교류 또한 대만사회의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89년 외성인의 고향방문 허용으로 시작된 민간교류는 급속도로 확대되어, 경제적 투자 및 무역, 혼인, 관광, 학술회의, 심지어는 정치인의 상호방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01년의 시작과 더불어 대만정부는 중국의 묵시적 동의하에 三通의 전 단계로서, 小三通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¹³⁾. 이러한 사회적 교류는 상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13) 三通은 중국과 대만의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상호교류를 의미하는 “通商”, “通航”, “通郵” 즉 “직접적 경제교류”, “직항로 개설”, “직접적 우편 및 통신 교환”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에 반하여, 小三通은 중국의 복건성 연안 도시 즉 廈門 및 福州과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는 대만의 몇 개 도서지역 즉 金門島와 馬祖島가 제한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측은 대만 측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삼통을 회피하기 위해 벌이는 술책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다.

2. 국민의 통일에 대한 태도와 집권 민진당의 선택

양안의 교류확대로 인한 상호의존 및 상호이해와 중국대륙의 잠재적 위협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 속에서, 대만 국민들의 독립 혹은 통일에 대한 정치적 태도는 국가정체성 혹은 대만의식 및 중국의식과는 상당히 상이한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Chang, 2000: 66-69). 아래의 <표2>에 의거하여 관찰하면, 다수의 본성인들이 표출하고 있는 높은 비율의 대만의식 혹은 대만인 의식에도 불구하고, “광의의 현상유지파” 즉 영원한 현상유지파를 포함하여 독립이든 통일이든 잠시 접어두고, 현지상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자는 주장이 무려 81.9%에 이른다. “즉각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은 겨우 14.3%에 불과하며, “현상유지 이후에 독립”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더라도 28.1%에 지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통일성향의 비율은 “즉각 통일”과 “현상유지 후 통일”을 포함하면, 18.7%에 이른다. 이는 중국의식을 표출하는 외성인의 인구 비율 13%정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비율이다. 이것은 바로 본성인 중에서도 상당한 비율의 사람들이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상술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양안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대만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대만의 지속적인 번영과 안정을 위해, 현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만과 중국대륙의 상호의존과 전쟁의 위협은 대만사회 내에 현상유지파를 양산하여 대만 본성인들의 “대만

인의식"이 곧바로 "대만독립의식"으로 전이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국가정체성과 독립의식 사이의 불일치를 가져왔다. 이것 즉 현상유지파의 완충작용은 어떤 면에서는 대만사회의 안정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독립파의 다수 세력화를 억제함으로써, 외성인들의 불안심리를 완화시키고, 나아가서 민족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실제로 대만사회 내에서 국가정체성을 둘러싼 대립이 파괴적인 사회적 충돌로 전이된 적이 한번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張茂桂, 1997b: 103).

<표 2>대만민중의 통일, 독립 혹은 현상유지에 대한 견해(1999, 8.27-31)

항 목	백분비(%)
현상유지, 이후에 재결정	39.6
현상유지, 이후에 통일	16.3
즉각 독립선포	14.3
현상유지, 이후에 독립	13.8
영원히 현상유지	12.2
즉각 통일	2.4
기 타	1.4
총 계	100.0

자료출처: 『民衆對當前兩岸關係之看法』의 결과보고서 요약을 이용하여 재구성

이러한 상황하에서, 민진당은 비록 대만의식 혹은 대만독립이라는 담론을 이용하여, 정치적 동원에 성공하고, 궁극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룩했지만, 다수의 국민이 현상유지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만독립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그들은 이미 당내에서 대만독립을 포함하고 있는 당헌과 당 강령의 수정을 진지하게 논의하

고 있고, 또 상당한 정도의 수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진당은 양안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수정 없이는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지지세력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대륙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 및 사회교류를 통해 상호 의존을 확대시키고 있고, 또 상당한 정도의 민족적 동질성도 확인해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또 대만 민중의 독립과 통일에 대한 태도를 면밀히 분석해 볼 때, 급진적인 대만독립 세력은 소수에 불과하므로, 지속적으로 대만해협 양안의 긴장을 증폭시키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통일 지향적인 세력들에게 직·간접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교류확대를 요구함으로써, 대만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키고, 또 대만 민중에게 사회 문화적 동질성을 각인시켜, 중국대륙에 대한 적대감을 완화시키려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V. 맺는 말

대만사회는 기타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는 판이하게 다른 사회구조 속에서, 독특한 변천체적을 보여주고 있다. 대만의 국가형태는 식민국가의 국가기구 위에 중국대륙으로부터 이주해온 또 다른 국가통제기구가 중복 설치되어, “초과대성장 국가” 형태를 띠고 동시에 대만사회의 모든 가능한 반대세력

을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초강대 국가”와 “최약체 사회”의 전형을 이루었다. 국민당정권이 채택한 사회주의식 당국지배체제와 그 자신의 이민정권적 성격은 사회에 대한 독특한 지배전략을 구사하게 만들었다. 국민당정권은 사회의 기층조직에 까지 침투하여, 직접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 중앙당이 말단 행정단위에까지 상근 당간부를 파견하여, 지방당을 조직하고, 당의 영도 하에 기타 다른 사회조직을 지휘하였다. 또 지속적인 정치적 동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방파벌을 조성하여, 국민당과의 이익교환을 위한 공동운명체가 되도록 하였다. 국민당정권은 이러한 지배체제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물질적 기초를 직접 통제하길 원했으며, 이를 위해 당국자본주의라는 독특한 경제체제를 운용하였다. 당국자본주의체제는 자본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공영기업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며, 동시에 국민당이 직접 통제하는 방대한 당영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지배를 위한 충분한 물질 기초를 확보하고 있었다.

대만의식으로 무장된 민진당에 의한 정권교체는 국민당정권의 당국지배체제를 와해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진당의 취약한 정치, 사회적 동원능력에 비추어 볼 때, 50여년 동안 뿌리깊게 형성된 국민당과 사회조직간의 이익교환시스템이 단순한 중앙정권의 교체만으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당은 사회에 깊이 내재해 있는 정치, 사회적 조직역량을 동원하여 완강히 저항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조직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조합주의적 지배의 틀이 와해되고, 자주적 사회조직으로 재조직화되는 움직임을 보이

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한 물질적 자원을 국민당과의 이익교환관계 속에서 확보하고 있는 지방의 사회조직까지 새롭게 재조직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진당과 신사회운동조직의 선택적 친화성에 기초한 연대가 기대되지만, 90년대 말의 신사회운동의 침체국면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대만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민사회적 특징과 국민당의 이민정권적 성격으로 인하여, 민족간의 대립과 격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1980년대 말 대만의식의 고양과 정치사회의 본토화를 구호로 내세운 민주화 운동이 민족의식에 기초한 정치적 동원을 주요전략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만의식”을 강조하는 본성인과 “중국의식”을 고수하려는 외성인의 이질감과 적대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것은 곧 바로 국가정체성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또한 외성인의 기득이익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표출되는 저항의식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본성인 중에서도 복건성 배경의 대만인에 의하여 주도되는 대만인 위주의 본토화에 반발하는 광둥성 배경의 객가인의 소외감이 서서히 사회전면으로 표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만과 중국대륙의 경제 및 사회교류의 확대는 서로에 대한 상호의존 특히 대만의 중국대륙에 대한 경제의존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서로의 동질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대만과 중국의 양안문제는 대만 민중의 높은 대만인에 대한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독립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대량의 완충세력을 형성시킴으로써, 독립파와 통일파가 대립하여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있다.

<참고 문헌>

- 龔宜君,『移入政府的滲透能力(1950-1969):改造後國民黨正權社會基礎的形成與鞏固』,國立臺灣大學社會學研究所博士論文,1995.
- 朴允哲,『臺灣發展經驗中的國家與階級』,國立臺灣大學社會學研究所碩士論文,1990.
- 新臺灣發展文教基金會編,『新臺灣國政藍圖』,臺北:新臺灣發展文教基金會,1992.
- 吳介民,『反對運動與社會抗議的互動』,『中國論壇』,第335期,1989, pp.29-40.
- 沈宗瑞,『國家統合主義體制面臨轉型』,『中國時報』,15版,2000.
- 王甫昌,『族群同化與動員—臺灣民衆政黨支持之分析』,『中央研究院民族學研究所集刊』77,1994, pp.1-34.
- ,『族群意識、民族主義與政黨支持:1990年代臺灣的族群政治』,『臺灣社會學研究』第二期,1998, pp.1-45.
- 王振寶,『臺灣的政治轉型與反對運動』,『臺灣社會研究季刊』2(1), 1989, pp.71-116.
- ,『誰統治臺灣?:轉型中的國家機器與權力結構』,臺北:巨流圖書公司,1996.
- 韋積慶,『臺灣的國家機器—權力技術的分析』,政治大學社會學研究所碩士論文,1989.
- 張茂桂,『臺灣的政治轉型與政治的<族群化>過程』,『教授論壇專刊』4,1997a: pp.37-71.
- ,『談<身分認同政治>的幾個問題』,『民主鞏固或崩潰』(游盈隆主編),臺北:月旦出版社,1997b.
- 朱雲漢,『寡占經濟與威權政治體制』,『壟斷與剝削:威權主義的政治經濟分析』(蕭新煌等著),臺北:臺灣研究基金會,1989, pp.139-160.

- 陳明通, 「派系政治與臺灣政治變遷」, 臺北: 月旦出版社, 1995.
- 陳師孟·林忠正·朱敬一·張清溪·施俊吉·劉錦添合著, 「解構黨國資本主義: 論臺灣官營事業之民營化」, 臺北: 澄社, 1991.
- 何明修, 「民主轉型過程中的國家與民間社會: 以臺灣的環境運動為例(1986-1998)」, 國立臺灣大學社會學研究所博士論文, 2000.
- Alavi, Hamza, "The State in Postcolonial Societies: Pakistan and Bangladesh", *New Left Review*, no. 74, 1972, pp.59-82.
- Chang, Mau-Kuei Michael,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Sheng-chi Wen-ti in Taiwan : Focusing on Changes after Political Liberation," pp.93-150 in Chen Chung-min, Chuang Ying-chang, and Huang Shu-min (eds.), *Ethnicity in Taiwan: Social, Historical, and Cultural Perspectives*, Taipei: Institute of Ethnology, Academia Sinica, 1994.
- , "On the Origins and Transformation of Taiwanese National Identity," *China Perspectives*, no.28, 2000, pp.51-70.